

“언론·포털도 징벌적 손해 대상”

민주 미디어·언론상생TF서... “이달 중 입법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9일 언론개혁 입법과 관련해 개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뿐만 아니라 언론과 포털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TF단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이 전했다.

노 의원은 TF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에 기존 언론이 포함되느냐를 놓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 오늘 회의를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기존 언론도 포함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언론과 유튜브, SNS, 1인 미디어까지 다 포함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것”이라며 “포털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장치를 마련할 입

법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강력히 뿌리뽑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6개 언론개혁 입법에 나서기로 했지만 그동안 기존 언론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내부 논의를 지속해 왔다.

언론도 허위·왜곡 정보로 악의적·고의적 피해를 입힌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기존 언론은 ‘신문법’이나 ‘언론중재법’ 등의 별도 법안으로 규율하고 있다는 의견이 엇갈려 왔다.

노 의원은 포털도 포함시킨 데 대해서는 “과거에는 미디어 매체가 방송과 신문, 라디오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미디어 매체가 확장됐다. 포털이 뉴스 유통에 사실상 독점적 사업자이지만 그 책임을 묻는 장치는 없다”며

“포털은 허위 정보에 대해서 걸러내는 장치가 사실상 없는 상태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짜뉴스 유통에서 제일 큰 역할을 하는 게 포털로, 독점사업자라는 측면에서 규제하는, 쓰레기 기사를 퇴출시킬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런 측면에서 포털에 책임을 지울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달 중 언론개혁 6개 입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노 의원은 “미디어 관련 신속 피해구제를 위한 6개 민생법안을 2월 국회에서 집중처리 법안으로 정했고 처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가짜뉴스 처벌 대상 중 언론을 뒤늦게 포함시켰다는 지적에 대해선 “안 넣는다고 하지는 않았다”며 “1차적으로 가짜뉴스가 잡히고 범람한 것이 유튜브와 SNS, 1인 미디어라고 봐서 이를 타깃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지

는 것이었지 언론을 빼지는 것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다만 “가짜뉴스”를 정의해 처벌하는 것은 시간을 두고 논의하기로 했다. 노 의원은 “가짜뉴스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보는 사람 따라 다를 수 있기에 짧은 시간 내 처리할 수 있는 법이 아니다”라며 “상당히 숙려기간이 필요하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언론의 자유 침해 논란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과도한 침해를 하는 것인가”라며 “내가 기사를 2년 했는데 과도한 침해가 결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얘기를 들어보니까 피해구제 민생법안이지 언론탄압법이 아니지 않느냐”면서 “내 21년 기자(생활)의 양심을 걸고서 하는 법이니 정정으로 흐른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호언했다. 노 의원은 매일경제와 MBC 기자 출신이다. /뉴스

‘전통시장에 활력을’

전주시의회, 설 맞이 장보기 행사



전주시의회 강동화 의장과 이기동 운영위원장 등이 9일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아 장보기 행사에 나섰다.

이날 의원들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명절음식과 농수산물 구매하는 장보기 행사에 참여했다. 강 의장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전주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 전통시장의 분위기를 북돋우고자 힘썼다.

강동화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새해에도 이어지고 있어 마음이 매우 아프다”며 “올해에는 반

드시 코로나를 극복해 시민들과 상인 여러분의 웃음소리가 넘치는 전통시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전주시의회에서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장보기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장소와 일정을 분산해 진행했다. /김윤상 기자



공공성강화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등 22개 단체는 9일 전북도청 앞에서 “전북도 감사 결과 정읍시는 자격이 없는 농업회사법인이 소유한 산지를 농지로 변경하게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라벤더허브원 사업을 중단시키고 진상을 파악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 “정읍라벤더허브원 특혜 의혹... 진상조사 필요”

“정읍시, 자격 없는 농업회사법인 소유 산지 농지 변경 사실 확인돼”

전북 정읍라벤더허브원 조성에 정읍시의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공성강화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등 22개 단체는 9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 감사 결과 정읍시는 자격이 없는 농업회사법인이 소유한 산지를 농지로 변경하게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라벤더허브원 사업

을 중단시키고 진상을 파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해당 농업회사법인은 지난 2017년 산지를 매입해 호두나무 등을 심었다며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았지만, 라벤더를 조성하거나 허브원 사무소 등으로 이용했다.

단체는 “산지로 보전돼야 할 땅에 라벤더가 심어지고, 허브원이 들어서

농업회사법인에 이익을 안겼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법인이 명의를 빌려 보조금 3억원을 불법 지원받은 사실이 전북도 감사 결과 드러났는데, 전북도는 정읍시 공무원 3명을 훈계 조치만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전북도 감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에 고발해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새만금해수유통 추진 공동행동 9일 전북도청 앞에서 새만금기본계획 변경(안)에 해수유통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만금 기본계획변경안에 해수유통 명문화 하라”

해수유통 추진 공동행동

새만금해수유통 추진 공동행동은 9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기본계획 변경(안)에 해수유통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5일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기본계획변경(안)을 작성하고 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했고, 새만금 해수유통을 결정할 위원회 회의가 24일로 예정돼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새만금해수유통 추진공동행동

은 “새만금의 역할을 그린뉴딜과 신산업 중심지로 재정립하기 위한 기본계획 변경이 진행되고 있다”며 “하지만 여기에 해수유통과 연계되는 개발정책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새만금을 그린뉴딜 1번지로 만들겠다고 하면서도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와 신산업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에 변경되는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드시 새만금 해수유통 결정이 명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호상 기자

이용호 의원, ‘장기기증사랑 인연맺기법’ 대표발의



국가가 장기기증자와 기증받은 수혜자 상호 간에 쌍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장기기증 기증자 및 유가족을 위하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상호간의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의 ‘장기기증사랑 인연맺기법’(장기기증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국가는 장기기증자, 장기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 장기기증자인 근로자의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제비·진료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기기증 관련 업무 담당자 외의 사람에게 국가가 장기기증을 촉진하기 위해 기증받은 수혜자 상호간 쌍방의 장기기증자와 이식대상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장기기증 관련 민간기관을 통해 상호간의 서신교류를 지원하는 사례가 있다. 이에 따라, 국내도 도입해 장기기증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장기기증 유가족과 장기이식자 간 상호 교류활동에 대한 규정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유호상 기자

민주 전북도당, 설 명절 김제·정읍 전통시장 등 찾아 지역민생 탐방

코로나19로 지친 소상공인·지역민 위로

“K방역 성공 위해 정부와 함께 최선 다 할 것”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성주)은 9일 김제, 정읍시 전통시장과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찾아 고충을 듣고, 지역민심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통시장 장보기에 나선 김성주 도당위원장은 “코로나19로 지친 소상공

인과 지역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연대와 협력으로 서로를 지켜주는 전북 도민께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K-방역의 성공을 위해 정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지역 민생탐방에는 윤준병 국

회의원(정읍·고창)을 비롯, 박준배 김제시장, 유진섭 정읍시장, 황영석(김제시 제1선거구), 나인권(김제시 제2선거구), 김철수(정읍시 제1선거구), 김대중(정읍시 제2선거구) 도의원,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 조상중 정읍시의회 의장 및 각 지역 시의원들과 전북도당 사무처 직원 등이 함께했다. /유호상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대한독립 만세를 부를 것이다.

나를 천국에 가셔도 우리 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을 쓸 것이다.

2월이 오면 청년 안중근을 기억합니다

사형이 집행되는 순간까지 개인의 안위보다 공동체 존속과 조국 독립을 염원했던 청년 안중근.

그 날의 외침을 기억하겠습니다. 그 날의 곧은 결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안중근 의사 순국 111주기 1910년 2월 14일은 32살 청년 안중근의 사형선고일입니다.

마스크 착용 '필수'·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